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江原日報	02면	김 지사 '47억' 시·도지사 중 4번째 시장·군수 최고 재력가...	1
강원도민일보	25면	민선 2기 체육회 출범 강원체육 백년대계 다짐	2
강원도민일보	23면	양명환 강기총 회장 "특자도 성공 출범 기독교계 힘 모을 것..."	2
강원도민일보	22면	"민·관 협력 강원 복지 사각지대 지원·관리 첫 걸음"	3
江原日報	온라인	강원특수교육원 입지 선정 반발...도교육청 "번복 없다"	4
강원도민일보	22면	강원도 소셜크리에이터 발족	5
강원도민일보	03면	국회의사당 앞 '정치개혁' 외친 청년들	6
강원도민일보	03면	민주 도당 해파랑연구소, 강특도 과제·역할 모색	7
江原日報	19면	[강원포럼] 365일 학교 도서관을 돌려주자	8
江原日報	21면	[동정] 정재웅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춘천·사진 왼쪽...)	9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정재웅 도의원	9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심영곤 강원도의원	9
江原日報	01면	'알맹이 빠진' 강원도·삼성전자 면담	10
The JoongAng	08면	시·도지사 절반, 서울·경기에 집 ... “말로만 지역균형발전”	11
강원도민일보	04면	강원특수교육원 지역별 설립 후보지 선정부터 난관	12
강원도민일보	03면	강특도 특례 확대... 도 정치권 "실질적 권한 이양" 한 목소리...	12
강원도민일보	04면	도시장군수협의회, 수산부산물 범위 확대 법개정 촉구	13
江原日報	14면	동해시 수소경제 거점도시 도약 나서	14
江原日報	10면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확대 '고심'	15
KBS 춘천	온라인	동해안에도 ‘낭만 포차’ 추진...야간 관광 활성화	16
강원도민일보	17면	[사설] 고향사랑기부제 제한 풀어야	17
강원도민일보	17면	[사설] 강릉 유천초 사안 대화로 마무리짓길	18
江原日報	19면	[사설] ‘미래형 환승센터’ 강릉역, 지역의 랜드마크 돼야	19
江原日報	19면	[사설] 지역 정치권, ‘자치도법 개정안’ 통과 역량 발휘를	20

/ 도내 지자체장 재산내역 공개 /

김 지사 '47억' 시·도지사 중 4번째 시장·군수 최고 재력가는 강릉시장

김 지사 주택 매도예금 증가
신경호 교육감 4억여원 감소
도의원 최다 김기홍 부의장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해 9월 첫 재산 공개 당시보다 6억원 가량 증가한 47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김 지사는 종전보다 6억282만원이 늘어난 47억4,194만원을 신고했다.

김 지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공동 소유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예금이 9억7,488만원에서 16억8,370만원으로 증가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부인과 공동 소유 중이며 양구와 경북 성주에 토지를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차량은 2023년식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2015년식 아반떼MD 2대를 갖고 있다.

김 지사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김영환 충북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에 네번째로 재산이 많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재산이 4억5,000만원가량 감소한 3억7,173만원을 신고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51억5,087만원,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7억6,602만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강원도 지자체장 재산 변동 내역

성명	현재가액	증감액
김진태 도지사	47억4,194만2,000원	▲6억282만3,000원
신경호 교육감	3억7,173만8,000원	▼4억5,067만9,000원
권혁열 도의장	14억11만1,000원	▲7,551만2,000원
김명선 행정부지사	7억6,602만8,000원	▲4,327만3,000원
정광열 경제부지사	51억5,087만9,000원	▼3,987만4,000원
육동한 춘천시장	13억7,547만1,000원	▲2억826만원
원강수 원주시장	8억4,556만2,000원	▲3,257만원
김홍규 강릉시장	60억4,111만8,000원	▼1억8,892만2,000원
심규언 동해시장	6억5,205만3,000원	▼1억1,192만8,000원
이상호 태백시장	1억8,275만1,000원	▲1억4,597만2,000원
이병선 속초시장	4억4,973만4,000원	▲1억7,533만6,000원
박상수 삼척시장	1억7,379만원	▲8,994만4,000원
신영재 홍천군수	6억1,028만6,000원	▲7,060만5,000원
김명기 횡성군수	4억3,785만6,000원	▲3,061만8,000원
최명서 영월군수	10억6,724만원	▲1억2,789만4,000원
심재국 평창군수	16억8,959만원	▲1억9,967만4,000원
최승준 정선군수	5억7,486만8,000원	▲3,926만9,000원
이현종 철원군수	7억5,288만8,000원	▲8,176만8,000원
최문순 화천군수	2억1,817만6,000원	▲2,518만1,000원
서흥원 양구군수	33억5,792만7,000원	▲2억1,863만9,000원
최상기 인제군수	3억8,473만원	▲2억6,790만3,000원
함명준 고성군수	4억4,334만2,000원	▲5,351만5,000원
김진하 양양군수	5억4,090만9,000원	▲1억9,412만3,000원

18개 시장·군수 중에는 김홍규 강릉시장이 60억4,111만원을 신고해 최고 재력가로 나타났다.

이어 서흥원 양구군수가 33억5,792만원, 심재국 평창군수 16억

895만원, 육동한 춘천시장 13억7,547만원, 최명서 영월군수 10억6,724만원, 원강수 원주시장 8억4,556만원, 이현종 철원군수 7억528만원, 심규언 동해시장 6억5,205만원, 신영재 홍천군수 6억1,028만원, 최승준 정선군수 5억7,486만원, 김진하 양양군수 5억4,090만원, 이병선 속초시장 4억4,973만원, 함명준 고성군수 4억4,334만원 순이다.

권혁열 도의장은 지난해 13억2,459만원에서 7,551만원 늘어난 14억11만1,000원을 신고했다.

도의원 중에서는 김기홍 부의장이 51억7,087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홍성기 도의원 41억5,751만원, 원제용 도의원 40억233만원, 문관현 도의원 38억4,637만원 순이다. 도의원의 평균 재산은 12억1,781만원으로 분석됐다.

한편 시·군의원 등 도내 공직자 공개 대상자 181명의 재산 평균은 8억2,628만원으로 종전 신고액보다 4,109만원 늘었다. 이 중 재산 증가자는 123명(68%)이고, 재산 감소자는 58명(32%)이다. 재산 규모는 5억원 이하가 93명(51.4%), 5억~10억원 37명(20.4%), 10억~20억원 36명(19.9%), 20억원 이상 15명(8.3%)이다.

이명애 속초시의원이 65억8,160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9일 (수)

스포츠 25면

민선 2기 체육회 출범 강원체육 백년대계 다짐

내일 양희구 도체육회장 취임

강원도체육회는(회장 양희구)가 오는 30일 오후 3시 강원체육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제40대 강원도체육회장 취임식 및 민선 2기 체육회 출범식'을 열고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를 연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강원체육, 건강한 강원도'를 비전으로 민선 2기를 맞이한 강원도체육회와 18개 시·군체육회의 공식출범을 알리며 '새로운 강원체육 백년대계'의 문을 열고 힘차게 나아가기 위함이다.

출범식은 양희구 제40대 강원도체육회장 취임, 지난 민선 1기 주요 성과 보고, 민선 2기 체육 비전 제시 순으로 이뤄지며, 강원체육 발전과 강원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소통·연대를 강조하는 기념사, 출범 세레머니, 체육인 퍼포먼스 등 다양한 이벤트도 열린다.

내빈으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기관장, 18개 시·군체육회장, 68개 회원종목단체장과 임직원, 도내 체육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심예섭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30일 (목)

인물 23면

양명환 강기총 회장 “특자도 성공 출범 기독교계 힘 모을 것”

횡성감리교회서 취임식 열려
도내 현안 지원·봉사활동 다짐
열악한 시골교회 지원 등 포부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신임 회장에 양명환 횡성감리교회 담임목사가 취임했다. 도기독교총연합회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대규모 국제행사 지원 등 강원지역 현안에 힘 모으기로 했다.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이하 강기총)는 지난 28일 횡성감리교회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 김명기 횡성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 정책 세미나를 잇따라 열었다. 정기총회에서는 양명환 목사를 대표 회장으로 선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28일 횡성감리교회에서 열려 양명환(사진 오른쪽) 신임 회장에 취임하고 이수형 전 회장이 이임했다.

출하고 도정 주요 사업에 발맞춘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도내지역별 기독교연합회장들은 오는 6월 화천에서 한국전쟁 73년 강원 DMZ 문화제를 여는 것을 비롯해 강원

특별자치도 조찬기도회, 청소년동계 올림픽 지원컨퍼런스 및 성공기원 문화축전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수형 전 회장(순복음춘천교회 담임목사)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김진태 지사는 세계산림엑스포,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강릉 세계합창대회 등 강원도 현안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최근 사회문제도 다시 떠오른 사이비 종교에 대한 대응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두달 반 정도 남았는데 굵직한 현안이 많다. 강원도에 사이비 집단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도움주시고 강원도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 희생하고 봉사하는 도정, 강원도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명환 회장은 “큰 직분을 맡게 돼 영광스럽다. 강원도 교회의 복음화에 힘쓰겠다”며 “강원도내 국제행사 등에서 교회들이 봉사하도록 적극 협력하는 등 강원도정현안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이어 “117년의 역사를 가진 횡성감리교회는 일제강점기 시대 4·1 독립운동을 주도한 곳”이라며 “기독교정신은 애국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선교역사의 2세기를 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 회장은 “강원도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골 교회도 많다. 규모가 작은 시·군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교회협의회 등을 만들어 이들 교회를 도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수형 전 회장은 “회장직을 하는 3년간 많은 분들이 해주신 기도와 교회와 도정이 함께하는 좋은 모델을 만드는 동력이 됐다”고 했다.

한편 강기총은 이날 서울 사랑플러스 병원(병원장 국희균)과 업무협약을 체결, 강기총 소속 목회자들의 진료 지원도 강화했다.

김진형 formation@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30일 (목)

인물 22면

“민·관 협력 강원 복지 사각지대 지원·관리 첫 걸음”

도사회복지관협 사업 선포식
11개 시군 16개 복지관 참여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속보=강원지역 11개 지역 내 복지관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본지 3월 20일 27면)에 본격 착수한다.

강원도사회복지관협회(회장 박현숙)는 29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구축사업 ‘이웃의 재발견’ 선포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박현숙 도사회복지관협회장을 비롯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찾고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웃의 재발견’ 사업선포식이 29일 춘천 베어스호텔 소양홀에서 열렸다. 황유민

한 복지관 종사자들과 허영 국회의원, 김기홍 강원도의회 부의장, 김동후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이은영 도사회서비스원장, 오혜경 도자립

지원전담기관 원장, 이선희 적십자동해지구협의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강원지역 11개 시·군 내 16개 복

지관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각 복지관별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단을 구성해 위기가구를 상시 발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전 가정방문을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위기 지원금 지급 등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도사회복지관협회는 이날 강원지역 12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도 맺고 올해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박현숙 회장은 “강원지역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의 첫 걸음을 뒀다”며 “앞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가운데 주도적으로 복지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주영

강원특수교육원 입지 선정 반발...도교육청 "번복 없다"

'준천 본원, 원주·강릉 분원' 방침에 원주 지역사회 반발 확산
"용역결과 공개. 접근성 고려한 건립 취지 맞게 재선정" 촉구
도교육청 "본원·분원 기능과 역할 같아...재선정 없다" 밝혀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를 위한 범시민 추진단(공동의장:함영우·김정윤·전서영, 사진 왼쪽부터)은 지난달 28일 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교육청의 강원특수교육원 설립 결정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지역사회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일보DB>

원주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지역 선정 결과에 반발해 원주 지역사회가 재선정을 요구하는 릴레이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특수교육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추진단을 시작으로 10여개 기관이 이에 동참했고, 원주 도의원도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 기관·단체들은 도교육청의 설립지 결정에 용역 결과와 접근성을 중요하게 반영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를 분원으로 선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히 드러냈다.



김기홍 강원도의회 부의장 등 원주 도의원 8명 전원이 지난 6일 원주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강원특수교육원 선정 반대를 촉구하며 구회를 외치고 있다. <강원일보DB>

하지만 도교육청은 강원특수교육원 입지 선정에 대한 번복은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주지역 단체의 요청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 다만 재선정은 없다"며 "강원특수교육원은 학생 접근도를 위해 분산 운영하며, 본원과 분원의 기능과 역할은 동일하게 운영할 방침"이라고 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30일 (목)

인물 22면



강원도는 29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2023년 강원도 크리에이터 발대식을 개최했다.

강원도 소셜크리에이터 발족

2023강원도 소셜크리에이터가 발족, 도정 소식과 도내 주요 정책을 홍보한다. 강원도는 29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2023년 강원도 소셜크리에이터 발대식을 개최했다.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과 김용균 강원도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도는 강원도 소셜크리에이터에 지원한 150개 팀 중 구독자수와 월 업로드 횟수 등 내부 심사를 거쳐 30개 팀(유튜브 10개 팀·SNS 20개 팀)을 최종 선정했다. 각 크리에이터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하며 도내 주요 이벤트와 각종 정책 및 음식·여행 등도와 관련한 콘텐츠를 담아 강원도 홍보에 나선다. 영월에 사업장을 둔 장소라(34) 씨는 “강원도가 새롭게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만큼 그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무엇보다 강원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국회의사당 앞 ‘정치개혁’ 외친 청년들

초당적 모임 ‘정치개혁 2050’ 선언
최재민·강대규 등 선거제 개혁 요구

국민의힘 소속 최재민(원주) 강원도의원과 강대규 변호사가 정치 개혁 메시지를 전달하며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목소리를 냈다.

최 도의원과 강 변호사를 포함,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구성된 초당적 모임 ‘정치개혁 2050’은 29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정치개혁·정당개혁 1000인 선언’ 행사를 열고, 현역 국회



최재민

강대규

의원들을 비롯한 정치권을 향해 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치와 선거제 개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양극단의 정치는 획일화된 정치를 벗어나지 못한다. 정치가 풀어야 할 시민의 문제는 다양하고 대변해야 할 처지도 각기 다르다”며 “국회가 시민들의 평범한 얼굴을 닮아야 하는 이유이자, 이

2023년 03월 30일 (목)

종합 03면

를 위해선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도의원과 강 변호사는 “보다 많은 강원도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개혁을 위한 활동에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30일 (목)
종합 03면



더불어민주당 도당 강원해파랑연구소(이기원 소장)가 29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조건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제공

민주 도당 해파랑연구소, 강특도 과제·역할 모색

출범 후 첫 토론회 열려

더불어민주당 도당 싱크탱크인 강원해파랑연구소가 출범 이후 첫 정기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원해파랑연구소(소장이기원)는 29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조건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기토론회를 개최했다.

정기토론회에는 김우영 도당 위원장과 전상규·주대하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허영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박윤미(원주) 도의원 백오인 횡성군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우영 도당 위원장은 축사에서 “강원도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함께할 수 있는 첫 토론회를 개최해 뜻깊다”며 “개문 발차라는 말이 있듯, 기차는 마련돼 있는데 무엇을 실을 건지 현재 강원특별자치도가 내용물이 충분하지 않은 상

황이다. 해파랑연구소와 함께 비전을 하나씩 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원 강원해파랑연구소장은 영상 축사에서 “이번 토론회가 강원특별자치시대를 맞아 도민의 삶이 어떻게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지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영 국회의원은 “향후 강원해파랑연구소가 강원도의 미래 방향성과 정책연구발굴에 힘써달라”며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원특별자치도 논리와 과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도민·주민자치 영역의 역할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주제로 1부·2부로 나눠 발제, 토론이 진행됐다.

김덕형 duckbro@kado.net

江原日報

2023년 03월 30일 (목)
오피니언 19면

지난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신경호 도교육감은 방학 중 학교 도서관 운영에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켰다. 현재 방학 중 학교 도서관을 운영하지 않는 곳은 강원, 서울, 대구뿐이

다. 앞으로도 강원도 아이들은 방학 중 학교 도서관에서 발표와 토론 등 다양한 독서 관련 활동을 기약하기 어렵게 됐다.

도는 2019년부터 2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학교 도서관 감성 디자인 프로젝트’에 투입해 편안하고 깨끗한 도서관 공간을 조성했다. 그동안 330개교의 도서관을 리모델링했다.

하지만 장서 확보율

은 교육부 기준 전국 꼴찌, 전담 인력 배치율은 50%를 겨우 넘

었다. 도교육청은 꼭 도서관을 통해서만 책을 접하는지 반문하며 교과 과정에 독서 활동을 넣었다고 주장한다. 교과 과정에 독서 활동을 넣었다고 방학 중에 학교 도서관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왜 전국의 다른 학교들은 모두 교과 과정에 독서 활동도 하고 365일 도서관을 개방해 운영하고 있을까? 학교 도서관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도서가 가장 많이 구비되고 관리되고 있다. 지자체의 시립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보다도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도서가 학교 도서관에 가장 많다.

강원포럼

박윤미 강원도의원



하지만 도내에서는 아이들이 방학 중에 여전히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시립도서관 등을 기웃거린다. 아이들의 학력 석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지역 내 차이는 물론 지역 간 차이도 점점 커지고 있다. 어떤 지역은 학교도서관이 아니어도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 책과 문화를 접할 수 있다.

365일 학교 도서관을 돌려주자

그러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작은 학교의 아이들은 학교 도서관이 제일 가깝고 유일한 문화 창구다. 그런 점에서 학교 도서관은 아이들 간의 문화 접근성에 대한 차이를 줄여주며 책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다. 우리는 지역 간 아이들 사이의 차이점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언제나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예산이다.

하지만 전국에 강원도를 포함한 3개 교육청에서만 방학 중 학교 도서관을 운영하지 않는 현실에서 이는 안타까운 핑계일 수밖에 없다.

예산 때문인지 도교육청은 방학 중에 전담 인력이 아닌 봉사자들로 학교 도서관을 개방한다고 한다. 차선책으로 학부모나 대학생 등의 봉사자로 학교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과연 제대로 된 도서관의 운영이 이뤄질 수 있을까?

특히 초등학교의 독서 습관은 평생의 독서 습관으로 이어진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간은 점심 시간과 방학 기간이다. 여름·겨울방학을 합쳐서 90일간의 긴 시간 동안 강원도의 학교 도서관은 아이들의 발길이 멈춰 있다.

방학에도 학교 도서관이 항상 365일 열

려 있게 하자. 언제든 지 학교 도서관에 가

서 책 읽고 친구들과 놀고 때로는 쉬는 열려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 멋지게 리모델링한 학교 도서관을 방학 때는 정작 아이들이 이용할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인가? 보여주는 식의 교육 행정인가?

전담 인력을 통해 아이들의 문해력과 발표 능력, 토론 등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이 방학 동안 이뤄진다면 강원도 학생들의 국어 학력은 지금보다 유의미한 향상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365일 학교 도서관을 아이들에게 돌려주자.

江原日報

2023년 03월 30일 (목)

인물동정 21면

도체육회장 취임식



◇정재웅강원도의회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춘천·사진 왼쪽)·박관희강원도의원(춘천)은 30일 오후 3시 강원체고 체육관에서 열리는 제40대 강원도체육회장 취임 및 민선 2기 체육회 출범식에 참석.

江原日報

2023년 03월 29일 (수)
정치

[동정]정재웅 도의원

정재웅(춘천)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박관희(춘천)강원도의회원은 30일 오후 3시 강원체육고교 체육관에서 열리는 제40대 강원도체육회장 취임 및 민선2기 체육회 출범식에 참석.

江原日報

2023년 03월 29일 (수)
정치

[동정]심영곤 강원도의원

심영곤(삼척)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은 31일 오전 9시 속초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제12회 수산인의날 기념 강원도 행사에 참석.

江原日報

2023년 03월 30일 (목)

종합 01면

‘알맹이 빠진’ 강원도·삼성전자 면담

김진태 지사-박승희 삼성전자 CR부문 사장 도청서 회동
원주 반도체교육센터 협력·홍천 메디슨공장 투자 확대 약속
“반도체 산업 직접 투자계획 없는 의례적인 방문” 평가도

속보=삼성이 29일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면담(분보 지난 27·29일자 1면 보도)하고 원주 반도체교육센터 협력 및 지원, 홍천 삼성메디슨 공장의 투자 확대 등을 약속했으나 ‘알맹이’는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이 강원도에 먼저 미팅을 요청했음에도 김진태 강원도정의 주요 공약인 삼성 반도체공장 유치를 비롯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박승희 삼성전자 CR부문 사장과 최승훈 부사장, 지형근 삼성물산 부사장은 이날 도청을 방문, 통상상담실에서 김진태 지사와 원강수 원주시장, 정광열 경제부지사, 윤인재 산업국장 등과 면담했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원주는 용인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와 거리가 가깝고 편리한 교통 및 접근성, 풍부한 기반시설, 정주여건 및 인력 확보 등에 경쟁력이 있다”며 원주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또 원주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기반시설 공급, 인력 양성 계획,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반도체 교육센터 사업 계획 등을 삼성 측에 설명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이에 삼성 측은 반도체 산업단지

서 원주의 우수한 입지여건에 공감하고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운영과 연계한 장비 지원, 교육 과정 공동 운영 및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사업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삼성은 이와 함께 홍천의 삼성 자회사인 삼성메디슨 초음파 공장 인프라 개선 및 공장 효율화를 위한 투자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원도에 전달했다. 스마트공장, 드림클래스, 스마트스쿨, 주니어 SW 아카데미 등 삼성이 직접 운영 중인 각종 사회공헌 사업도 강원지역으로 확장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저변 확대에도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강원 반도체 클러스터 생산시설과 기업 유치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 또 삼성이 지난 27일 울산, 대구, 광주 3개 과학기술원과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기로 협약하는 등 최근 ‘비수도권 달래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강원도 방문 역시 다소 ‘의례적’인 자리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삼성은 여건이 갖춰진다면 언제든지 오겠다는 입장이다. (여건 조성을 위해) 같이 인재를 양성하자고 의견을 나눴다”며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The JoongAng

2023년 03월 30일 (목)
정치 08면

시·도지사 절반, 서울·경기에 집 ... “말로만 지역균형발전”

(17명 중 9명)

홍준표·김진태 28억 강남집 두고
대구시장·강원지사 관사 사용
김동연 강남, 김영록 용산에 아파트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절반가량이 서울 강남 등에 아파트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재산신고 현황(지난달 말 기준)에 따르면 시장·도지사 17명 중 9명이 배우자와 공동명의 또는 부인 명의로 서울 강남, 경기도 분당·일산신도시 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서울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151㎡·27억6100만원·신고가액 이하 같음)를 신고했다. 부인과 공동명의다. 대구에 집이 없는 홍 시장은 남구 한 아파트(137.1㎡)를 관사로 사용 중이다.

역시 관사에 사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부인과 공동명의로 서울 대치동 선경아파트(128.3㎡·27억9300만원)를 신고했다. 학군이 뛰어나고 역세권이라 강남 재건축 대상주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비슷한 평형 아파트가 34억~38억원에 매물로 나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부인 명의의 서울 도곡동 도곡레슬 아파트(59.98㎡·16억4600만원)를 신고했다. 김 지사는 수원 광교신도시에 전세를 얻었다. 이 경우 대전시장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59.9㎡·10억

9900만원)를 신고했다. 최만호 세종시장도 부인과 공동명의로 신공덕동 아파트(57.4㎡·12억36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용산동 파크타워 아파트(100.3㎡·17억5900만원)를 신고했다. 이 밖에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관영 전북지사는 각각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성남 분당신도시 단독주택(대지 279.3㎡, 건물 284㎡·7억3000만원)과 분당 백현마을 아파트(117.5㎡·21억9100만원)를 신고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신고한 재산에는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아파트(134.9㎡·10억5000만원)가 포함됐다.

기초자치단체장 중 조규일 전주 시장은 부인과 공동명의로 된 강남 도곡동 래미안카운티 아파트(106.8㎡)를 24억1200만원에 신고했다. 홍남표 창원시장과 박일호 밀양시장은 각각 서울 여의도 대교아파트(151.7㎡·19억1500만원), 경기도 의왕시 의왕내손e편한세상 아파트(127.96㎡·9억7600만원)를 신고했다. 의왕 아파트는 GTX-C 노선 화재의 영향을 받은 단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수도권에 부동산을 보유한 단체장이 ‘지역균형발전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까’ 하는 의문을 주민들은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욱·안대훈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2023 공직자 재산 공개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정치 재산변동 신고내역

공개대상자 2037명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존·비속 포함), 자료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 공직자 재산 변동 내역

단위 명, () 안은 비중 % ● 증가 ● 감소

68(12.7)	1000만원 미만	112(7.5)
156(29.1)	1000만~5000만원	367(24.5)
81(15.1)	5000만~1억	307(20.4)
156(29.1)	1000만원 미만	617(41.1)
75(14.0)	1~5억원 이상	98(6.5)

고위 공직자 재산 규모

단위 명, () 안은 비중 %



재산총액 상위 공직자(100억원 이상)	성명	재산총액	증감액
서울 강남구청장	조상형	532억5556만	4억7950만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이원모	443억9353만	-2억241만
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임준택	311억5581만	115억4314만
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293억7624만	1억1776만
경기 도의원	김상수	268억1354만	-3억2659만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김은혜	264억9038만	-7610만
남원시장	최경식	215억7394만	-3582만
국무총리비서실장	박성근	200억440만	-29억2732만
제주 도의원	양용만	190억7586만	16억3740만
경북 도의원	박영서	173억8554만	7억3889만
경북 도의원	김용원	169억5260만	-4억2209만
산업연구부장	추현	162억2121만	-1억3921만
기초과학연구원장	노도영	157억9933만	2억9184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차상훈	153억7639만	-27억8352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148억7003만	-11억7302만
서울 구로구청장	문현일	148억5322만	5억4427만

대통령실 주요 공직자 재산 현황(수석급, 국가안보처 경호처 포함)	성명	재산총액	증감액
대통령	윤석열	76억9725만	5726만
비서실장	김대기	73억4567만	25억3099만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75억2533만	-3050만
정무수석비서관	이진복	17억8007만	2억8351만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강승규	18억9252만	1억2003만
경제수석비서관	최상목	40억2714만	1억9030만
사회수석비서관	안상훈	68억3516만	3억9227만
전 국가안보실장	김성환	52억1606만	4567만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태효	131억1284만	10억4819만
국가안보실 제2차장	임종득	12억1036만	-4억4931만
대통령경호처장	김용원	14억4203만	268만

강원도민일보

강원특수교육원 지역별 설립 후보지 선정부터 난관

2023년 03월 30일 (목)

종합 04면

도교육청 보유 부지 물색에도
접근성·수용규모 등 미달 고심
지자체 추천 검토 내달 말 결정

속보=강원도교육청이 각각 200억원
을 들여 강원특수교육원 춘천 본원을
비롯해 원주와 강릉에는 동일한 규모
와 기능의 본원을 조성(본지 3월 2일자
4면 등)하기로 하고 지역별 부지 물색
에 나섰으나 접근성을 충족할 마땅한

부지가 없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결과 강원도교육청
은 강원특수교육원 부지 선정 위원회
첫 회의를 최근 개최했다. 위원회에는
도교육청 내부 인사 외에도 춘천·원
주·강릉 지역별 학부모를 비롯해 지역
정치인 등이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설립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나 도교육
청이 보유 중인 부지가운데 학생·학부
모 접근성과 시설을 수용할 적정 규모
를 모두 충족하는 부지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강원특수교육원에서는 직
업 체험 프로그램, 장애 이해 체험 교육
이 3곳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각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확보된 부
지 여건에 따라 원별 건물 규모는 달라
질 예정이다.

원주의 경우 학생증, 원주영서고 실
습장, 원주교육지원청 현 부지 등이 거
론했으나 원주교육지원청 부지는 고도
제한이 있어 논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과 강릉은 적절한 부지조차 없

는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춘천
이 마땅치가 않아 제일 고민”이라며 “폐
교는 주로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
진다”고 밝혔다.

본지가 도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미
활용 폐교는 현재 춘천 1곳, 원주 3곳,
강릉 3곳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전
부 면 단위 소재지여서 도심과의 접근
성은 떨어진다.

상황이 이러자 앞서 열린 위원회 회
의에서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부
지 추천을 받자는 의견이 제기, 도교육

청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춘천·원
주·강릉시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자체 부지와 추천 부지를
전부 합쳐 다각도로 부지를 검토하겠
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
진행 상황으로는 4월 말은 돼야 부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당초 목표대로 올해
안에 설계용역까지 하기 위해서는 후
보 지역 결정 이후에도 중기재정계획
수립, 자체 투자 심의, 개축심의 등 5-6
개 과정이 남았다”고 했다. 정민엽

강원도민일보

강특도 특례 확대... 도 정치권 “실질적 권한 이양” 한 목소리

2023년 03월 30일 (목)

종합 03면

오늘 강특도 정부지원위 첫 회의
공감대 형성 원안통과 유도 방침
행안위 여야의원 물밑설득 속도
이철규·유상범 ‘가교 역할’ 기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강원특
별자치도 정부지원위원회가 30일 오
전 강원도청에서 열리는 가운데 제동
이 걸린 특례 조항에 대한 정부 각 부처
의 입장 표명이 주목된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가 예정되면서 주요부처 장관들의 참
석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에 전
달된 정부부처 참석자는 정부위원 20
명 중한 총리 외에 장관급은 4명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창섭 행
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조승환 해양
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 예정이고 남성현 산림청장, 이완
규 법제처장이 강원도를 방문한다.

도 정치권은 특례 조항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
최대한의 원안 통과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
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물밑 설득 작
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안을 심의하는 행안위에는 도출
신 의원들이 없는 상황이지만, 도 정치
권은 행안위 여야 간사를 비롯, 소속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개
정안 원안 통과와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
고 있다.

이와 함께 당정 차원의 관심과 지원
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방위적인 설득
작업이 준비되고 있다.

도내 여권에서는 국민의힘 사무총

장, 수석대변인으로 각각 활동하고 있
는 이철규 (동해·태백·삼척·정선)·유
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의
역할에 기대가 모아진다. 두 의원은 정
기적으로 개최될 당정협의회 등을 통
해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조항에 대한
정부 입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계획으로, 강원도와 정부 간 가교 역할
을 책임져 줄 것으로 보인다.

도농융합 (비례) 의원은 내달 3일 진
행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
정부 질문에 출격, 한덕수 총리에게 강
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 도출신 의원들은 특
례 조항에 대한 야당 내 이견이 없음을
거듭 확인, 정부의 권한 이양이 수월하
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를 포함한 집
권 여당을 상대로 한 설득에 매진할 계
획이다.

권성동 강원도 국회의원의회의장은
“강원도와 강원도민들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도내 여
야 의원들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된 강원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
고 말했다. 이세훈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30일 (목)

종합 04면

도시장군수협의회, 수산부산물 범위 확대 법개정 촉구

용문~홍천 철도 조기착공 등 요청

도내 시군 단체장들이 수산부산물로 발생하는 악취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수산부산물법 개정을 적극 요청키로 했다.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진하 양양군수)는 29일 강릉 탑스텐호텔에서 민선 8기 1차년도 제4차 정례회를 갖고 각 시·군의 주요 현안이 담긴 안건들을 다뤘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법령상 수산부산물 종류가 패류껍데기로 한정됨에 따라 갑각류 및 어류 등을 추가하는 방안 등 수산부산물법 개정을 요청키로 했다.

이날 김홍규 강릉시장은 강원도 농업인수당 지원 확대방안을 적극 건의했다. 김 시장은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농업인구 감소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도내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내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 주관하에 18개



민선 8기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1차년도 제4차 정례회가 29일 강릉 탑스텐호텔에서 개최됐다.

시·군의 협의절차를 거쳐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착공 적극 추진, 낚시어선의 야간출항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강원특별법 군 급식 공급지원 수의계약 특례지역 확대 등 총 13개 안건이 통과됐다.

또 지난 1월 31일 양양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 8기 1차 연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 결과와 1월 26일 원주시에서 개최한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례회 건

의 사항 11건에 대한 처리 상황도 점검했다.

김진하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40년 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설악산 환경영향평가 통과됐는데 남은 절차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명품케이블카로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628년만에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위해 각 지역의 의견을 함께 나눠 좋은 결론을 도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제 dusdn2566@kado.net

江原日報

2023년 03월 30일 (목)

지역 14면

동해시 수소경제 거점도시 도약 나서

30, 31일 그린수소 심포지엄

【동해】동해시가 미래 신성장 동력인 수소산업 육성을 통해 수소경제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선다.

이를 위해 30일부터 31일까지 현진관광호텔에서 ‘2023 그린수소 Power to Gas 심포지엄’이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에 이어 동해시에서 두 번째 열리는 행사로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와 한국동서발전이 공동 주최하며 강원도와 동해시,

전국의 수소 관련 유관기관·연구단체·기업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심포지엄에 앞서 사전행사로 송락현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장, 심규언 동해시장, 윤인재 강원도 산업국장,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한 최재훈 한국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장, 김규태 동해상공회의소 회장, 수소기업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에너지 선도기업 초청 간담회’를 갖는다.

정익기기자 igjung@kwnews.co.kr

江原日報

2023년 03월 30일 (목)
지역 10면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확대 ‘고심’

정부 지원대상 제한 폐지 추진 여파... 시 “재정부담 커”

【춘천】저출산 해결 방안으로 난임부부 지원대상 제한 폐지가 급부상하면서 춘천시가 늘어날 예산 부담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주재한 저출산고령화위원회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제안했다. 소득 제한, 횟수 제한 등을 모두 없앤다는 것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강원도가

예산의 60%, 춘천시가 40%를 부담하는 매칭 사업으로, 중위소득의 180%(2인 가구 기준 월소득 622만원)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춘천시의 경우 2021년 3억9,700만원, 2022년 4억9,067만원에 이어 올해 4억5,400만원을 투입해 2021년 521명, 2022년 671명이 지원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난임부부 3쌍 중 1쌍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방침

대로 지원대상 제한을 폐지할 경우 추가예산 확보와 인원 추산 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최근 지자체마다 제한 폐지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달 들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등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고 도내의 경우 원주시의회가 지난 17일 ‘차등 없는 난임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춘천시의회도 이선영 시의원(더불어민주)이 다음 달 6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차등 없는 난임시술비 지원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선영 시의원은 “지원대상 제한은 역차별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춘천시가 추진하는 인구 30만 만들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춘천시 합계출산율이 0.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난임부부 지원 확대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지만 지원 규모나 기준을 비롯해 재정 부담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현정기자 hyun@kwnews.co.kr

동해안에도 '낭만 포차' 추진...야간 관광 활성화



[앵커]

전라남도에는 여수 밤바다를 상징하는 일명 '낭만 포차' 거리가 조성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속초시도 침체된 야간 관광 확충과 즐길거리 확대 등을 위해 이런 '포차 거리'를 추진합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처음 조성된 전남 여수의 '낭만포차' 거리입니다.

여수 밤바다를 즐길 수 있는 포장마차 이른바 '포차' 1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색적인 야경과 먹거리 등으로 포차 자체가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1년 단위로 모집하는 운영자 가운데, 청년과 취약계층 참여를 배려한 점도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기은/여수관광협의회 국장 : "낭만포차가 여수의 야경하고 맛과 그런 어울림들이 있기 때문에 낭만포차에 대해 찾는 수요가 가면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속초시도 침체된 야간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포차 거리' 조성을 추진합니다.

사업 예정지는 속초항 주변 항만부지 약 4천 제곱미터, 예산은 7억 원 정도입니다.

올해 강원도와 부지 사용을 협의한 후 내년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이 현실화되면 이곳에는 속초 밤바다를 즐길 수 있는 포차 30개 정도가 들어섭니다.

주변 다리 등과 연계한 야간 경관 조명도 설치될 전망입니다.

밤 시간대 별다른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원기/속초시 해양수산과장 :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속초 도심의 야경과 밤바다를 감상하며 하루를 머물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수 낭만포차 운영 초기, 주차난과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 불만과 민원이 잇따른 점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정면구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30일 (목)

사설/칼럼 17면

고향사랑기부제 제한 풀어야

-기업 참여·기부금 상한 폐지로 활성화 기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희생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4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강원도내 안팎에서는 올해 초부터 참여 열기가 뜨거웠으나 최근엔 다소 주춤한 상황입니다. 모금액 공개 여부를 지자체 판단에 맡겨 정확한 액수를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추세는 도내 18개 시군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지자체 재정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허울뿐인 제도에 머무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부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참여 저조 현상은 시군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내 한 지자체의 경우 기부제가 시행되자마자 보름 만에 참여건수가 100여건에 달했지만,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모금액도 편차를 보여 도와 지자체가 답례품 재선정 작업에 들어가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행 초기 관심이 '반짝 열기'에 그쳐, 상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법인 참여 금지와 기부금 상한액 제한이 기부제 활성화의 가장 큰 걸

림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부 금액의 30% 이내로 답례품 제공이 가능하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참여를 막아 충분한 금액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기부한 금액을 정해제도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부작용을 우려해 법인 참여 배제와 공무원 기부 권유 금지 등 제약을 과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와 관련, 국회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수정 보완한 법안들이 잇따라 올라와 기대를 모읍니다. 법인 기부를 가능하게 하고 상한액을 폐지하는 한편, 공무원의 기부 권유·독려 금지 조항도 없애는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기부제의 취지에 맞게 문제점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기부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지자체와 기업의 유착 우려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어 참여 열기를 확산하고, 기부한 돈을 폐지해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30일 (목)

사설/칼럼 17면

강릉 유천초 사안 대화로 마무리짓길

-도교육청 합의 이행 방안, 소통으로 돌파구 찾아야

강릉 유천초등학교 혁신학교 지정 취소 및 교사 징계 등을 둘러싼 사안이 급기야 경찰 공권력을 빌리는 것으로 비화됐습니다. 유천초 혁신학교 철회와 부당징계 취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관계자 여러명이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면담을 위해 3월 27~28일 교육청에서 시위하던 중 현행법으로 체포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신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공대위 측 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조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날 공대위측 5명이 경찰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가게 되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대위 측은 신 교육감이 유천초 사안 해결을 위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측간 합의서에는 △유천초 사안에 대한 교육감 유감 표명 △징계교사 당사자 의견 반영한 인사조치와 치유 협의 등 7개항이 담겨있습니다. 이 합의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됐는지 세밀하게 알 수 없으나, 일단 양측의 신뢰를 기반으로 작성된 만큼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대로 지키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불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파기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지속해 절충점을 찾아내는 것이 합의의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대위 측이 면담

예약한 당일 신 교육감이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워야 했다면 일정을 늦춰서라도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는 협상이 해결에 유리한 방안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기에 경찰 공권력을 동원했다가 불통 상황을 악화해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늦었더라도 도교육청과 공대위 양측은 절충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여 3년째 고통을 가하는 이 사안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마침 도교육청측에서 원만한 정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고 더 큰 권한을 보유한 만큼 능동적으로 합의사항 이행 방안을 찾길 기대합니다.

한편 혁신학교로 운영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정을 철회한 유천초 사안은 도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선 학교측과 충분한 소통 및 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집행 중요성을 새삼 일깨웁니다. 얼마 전 도교육청에서 철원의 김화공고를 군사교육 특화학교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학생 진로를 따져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이견의 여지가 있습니다. 설익은 교육정책 결정은 혼선을 부르기 쉬우므로 우선 다각적인 안을 놓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에 공표할 것을 주문합니다.

江原日報

2023년 03월 30일 (목)

사설/칼럼 19면

‘미래형 환승센터’ 강릉역, 지역의 랜드마크 돼야

강릉역이 국토교통부의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미래형 환승센터는 철도, 버스를 연계한 기존 환승센터에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 모빌리티까지 연계할 수 있다. 강릉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다. 옛 강릉 지역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미 강릉은 관광지 22곳을 연계하는 관광형 자율주행차가 올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마스(MaaS) 플랫폼 기반의 여행센터, 전기킥보드, 초소형 전기차, 수요응답형(DRT) 버스를 운영하는 미래형 모빌리티 환승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강릉시는 2026년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지능형교통체계) 세계총회를 유치한 후 미래형 첨단 교통체계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강릉역의 ‘미래형 환승센터’가 앞으로 강릉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

강릉시의 ‘강릉역 마스 스테이션’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1층은 환승주차장이 갖춰지고 카셰어링, 렌터카 등이 대상이다. 지상 1층엔 자율주행차, 택시, PM 등 모빌리티 정거장이 설치되고, 지상 2층에서는 시내버스와 셔틀버스를 탈 수 있

다. 3층은 상업·업무시설이며, 4층 옥상은 UAM 탑승장이다. 강릉역에 미래형 환승센터가 조성되면 모바일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모빌리티 간 연계 환승할 수 있다.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다.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심 경제권도 형성될 것이다. 강릉역 주변을 중심으로 진행될 다양한 개발사업에도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다.

2026년 개최 예정인 ITS 세계총회 등은 강릉역을 중심으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확대하게 된다. 동해안권 교통 및 관광 허브로 부상할 호재다. 미래 교통을 선도하는 중심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조성을 통해 2023 강릉세계합창대회, 2024강원동계청소녀올림픽, 2026 ITS 세계총회 등 주요 국제이벤트 성공 개최 및 외국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형 환승센터는 여러 모빌리티 간 연계 환승을 원활히 함으로써 이용객의 환승 편의성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교통 중심개발(TOD)의 핵심 거점 기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강릉시가 미래형 환승센터를 발판으로 미래 교통체계를 혁신할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江原日報

2023년 03월 30일 (목)

사설/칼럼 19면

지역 정치권, '자치도법 개정안' 통과 역량 발휘를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즉,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정부 부처와 협의가 중요하다. 당초 25개 조문으로 구성해 제정한 법안을 환경·산림·군사·농지 등 4대 핵심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 등 137개 조문으로 세분화시켰기 때문이다. 현재

로선 정부 부처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각 상임위에 속해 있는 도내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소속 정당이 다르고

정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다. 국정을 살피면서도 강원인들의 의견을 국회에 반영하고 강원도와 강원인들의 이익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사람들이다. 더욱이 올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와 18개 시·군 발전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중대사다. 강원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대대적인 인프라 시설을 확충했다면,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서는 도민들이 충분히 먹고살 수 있는 사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자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온전히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개정안 대부분은 특례로 규제 혁파와 관련이 있다. 각종 환경 규제에 묶여 있던 강원도는

그간 '시대적 보상'이 아닌 당연한 '자율적 권리'의 몫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었다. 강원도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 규제 철폐는 환경 훼손'이란 국민적 개념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 규제 완화를 통해 오히려 환경이 보존될 수 있다는 점들을 강조, 국민적 공감을 얻어 나가야 한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앞서 환경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풀어내야 하는 부분들은 결국 정치의 영역이다.

그동안 강원도는 정치의 변방이었다. 그러나 정치지

형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소위 중앙정치권에서 인정받는 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거 등장했다. 지금 강원도는 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어우러진 공동의 노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대표 발의

산림·환경·군사 등 특례, 정부 부처 이견

도 출신 국회의원들, 적극성 갖고 나서야

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다. 도의 수도권 종속은 인구가 적다는 이유보다는 도와 도 출신 국회의원들 간 정책 응집력과 적극성이 다른 지역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따라서 도와 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도 순항할 수 없다.

우선은 김진태 지사와 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성공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특히 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찾고 정파를 떠나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결집해야 한다. 강원인들은 이를 지켜보고 내년 총선에서 표로 보답할 것이다. 강원도정과 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런 정치의 본래 모습을 되찾을 때 지역의 미래가 열린다.